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조건에 관한 실증 분석\*

최유진\*\*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연구는 주로 내부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많지 않았던 외부 조건의 효과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의 추정 결과, 지방자치단체 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정부의 민간이전 지출 그리고 도소매업의 활성화 등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입문 과정으로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둘째, 민간이전지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셋째, 민간 부문 특히 도소매업체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구매 촉진 등 활성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단계적 회귀분석, 협동조합, 민간이전 지출**

\* 이 논문은 강남대학교 2018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 논문임

\*\*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echoi0816@icloud.com)

## I. 서론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지속가능성의 향상 등에 있어 기업가의 특성이나 조직 구조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혹은 산업 구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내부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효과에 관한 연구(이상연·전혜선·채명신, 2017; 김창범·이찬영, 2016; 이상연·채명신, 2015 등)나 사회적기업가의 특성의 효과(공혜원, 2019; 김정인, 2013 등)가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지속성에 대한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연구의 성과가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나 지역경제 현황 등은 사회적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한 연구조차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별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외부요인 형성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별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그동안 외부요인 즉,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조건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집 가능한 변수 유의한 변수만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시군구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이며,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회귀모형에서 추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현황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Kerlin(2009)과 Doherty, Haugh & Lyon(2014)의 주장처럼 개념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런 모호성에 대해 Hazenberg 외(2016)는 사회적기업의 기원이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와 전통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Defourny & Nyssens(2008)가 제시한 예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Defourny & Nyssens(2008)는 남유럽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북유럽과 달리 협동조합과 같은 노동 통합에 기초한 협력 분야이지만, 북유럽은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에 주로 기원하였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대체로 사회적기업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중심의 하이브리드 조직체로서, 전통적인 기업의 경영 모델(business model)을 활용하여 사회적 산출을 창출하는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강혜영, 2019; Pearce, 2003; Ridley-Duff, 2008; Dees, 1998; Doherty *et al*, 2014; Jenner & Fleischman, 2017).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제도로 정의 및 인증하고 있는 국가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2조 1항에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을 사회적기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 2) 사회적기업의 인증 현황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의 인증 업무 이래 매년 평균적으로 약 36%의 인증 증가율을 보여줄 만큼, 사회적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물론 사회적기업 성장에 대한 논쟁이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의도한 것에 비해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개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그 어떤 영역도 사회적기업의 성장만큼 성장을 이룬 부문이 없다.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진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2,519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7년에 불과 35개였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매우 이른 시간 안에 보편적인 경제 주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2년 안에 3,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고 운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2020년 5월 기준)<sup>1)</sup>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기업의 약 67%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기업의 주요 설립 취지와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인 것이다. ‘혼합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의 절대다수는 ‘일자리 제공형’의 유형으로 설립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진흥에 관한 주부 업무가 고용노동부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의 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과도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폐업하거나 인증을 반납한 기업은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된다.

또한, 50%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기타형’인데, 사회적 미션(social mission)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마땅히 체크할 사회서비스 유형이 없다는 점 또한 ‘기타’형이 압도적인 다수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 이후로는 ‘문화예술’, ‘청소’,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의 유형이 앞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유형 분류의 경우,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보건’이나 ‘간병가사지원’ 등은 ‘사회복지’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청소’와 ‘환경’도 사회적 미션으로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운동’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일 수 있다. 중첩이 일어나면 ‘기타’로 적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서비스 유형 구분은 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단위로 고려할 때,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에서 발전이 제약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탐구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기업과 성격이 유사한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거나, 포괄적인 사회적경제의 연구에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변수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요인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들 수 있다(예: 최지혜·이찬영, 2019).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해당 부문과 정부의 파트너십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편, 정부 지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단순히 지출의 규모보다 부문별 지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지출(social welfare expenditure)은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특히, 보육이나 간병, 저소득층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 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지출의 방식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전영옥·안국찬, 2009).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한 교육인 컨설팅 등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예산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민간이전 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최유진, 2016).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 경제’ 요인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지역 경제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지역의 산업을 정의하는 차원에 따라 지역 경제와 사회적기업은 ‘갈등 관계’일 수도 있으며, ‘협력 관계’일 수도 있다. Petrella & Richez-Battesti(2016)의 지적처럼, 사회적기업은 창업 후 시장으로 진입하여 시장에서 자원을 공급받으며 경쟁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시장이 사회적기업의 꾸준한 자원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산출물이 판매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지역경제와 사회적기업은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문에 사회적기업이 진입하거나 시장의 자원 활용에 있어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비영리 민간단체(non-profit organization)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비영리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는 ‘복지 국가 이론(welfare state theory)을’ 근거로 갈등 관계로 파악한다. ‘복지 국가 이론’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정부 활동의 잉여(residual)에 불과하다(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Pevcin, 2011).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여 재정을 뒷받침하는 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최대한 축소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는 경제의 성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산업의 구조와 산업의 환경도 사회적기업과 서로 연관될 수 있다. 산업의 구조나 환경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최현도, 2016). 경제 주체 중 참여적 조직체인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도 역시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창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최혁진, 2010). 협동조합의 전통이 오래된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이

높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과연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창업에 이르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근거로 지역 수요를 흡수하여 창업할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김진열·정문기·이규명, 2016) 이는 곧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배정환, 2011). 사회적 수요의 흡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은 정부 실패(governmental failure)를 강조한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지역 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수록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는 논리이다(Matsunaga, Yamauchi & Okuyama, 2010;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정부 실패가 발생한 사회서비스 수요층을 비영리 민간단체가 흡수한다는 논거가 형성되듯이 사회적기업 역시 그 지점에서 활성화 동력이 발생할 수 있다.

### III. 연구의 방법

#### 1.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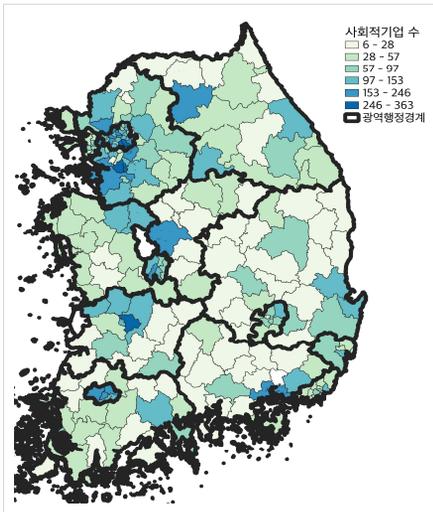
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세종시와 같은 광역시나 기흥구와 같은 행정구는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총 226개의 시군구 수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목록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수를 확정하였다. 226개

2) 이런 이유로 제주도의 경우 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도 연구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적기업의 수가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극단 값의 영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삭제한 후 20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여 회귀모형에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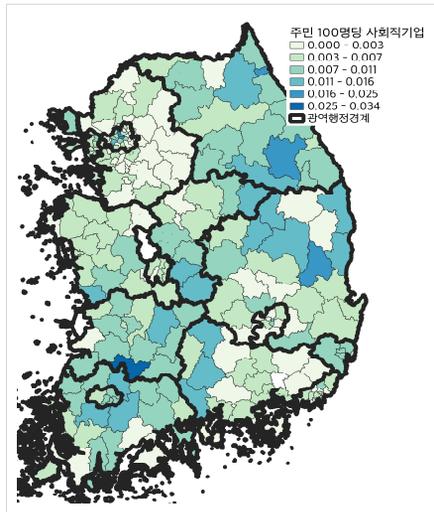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사회적기업의 분포와 이를 주민등록인구 규모로 표준화했을 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바대로 사회적기업은 광역시와 경기도 권역에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주민등록인구 규모로 표준화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강원도에서 광주시를 포함하는 전라남북도를 잇는 선위에 위치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도가 더 큰 것이 확인되며 오히려 경기와 인천 권역에 위치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정도는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속변수를 사회적기업의 인증 수로 할 것인지 혹은 인구 규모로 표준화한 지표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회귀식 추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역 주민의 수로 표준화한 변수를 활용한다.

<그림 1> 사회적기업의 분포



(제작: 저자)

<그림 2> 주민 100명당 분포



(제작: 저자)

## 2. 변수의 수집과 기술통계량

### 1) 변수의 수집

다음의 <표 1>은 이 연구에서 수집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 등을 담고 있는 표이다. 이미 전술한 바대로 이 연구는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정부 지출 요인과 산업 및 경제 요인, 사회 변동 요인 등이 사회적기업 수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의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 7월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정부 지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총 4개의 변수가 수집되었다. ‘expend\_per’은 주민 1인당 총지출을 의미하는 변수로 주민 1인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정의 크기를 의미한다. ‘p\_trans\_per’과 ‘c\_trans\_per’은 각각 주민 1인당 민간이전 지출과 민간자본 이전 지출을 의미한다. 민간이전 지출과 민간자본 이전 지출은 세출 과목 상의 구분으로 전자는 민간이 공공의 사업을 위탁 등의 형태로 추진할 때 이에 관한 경비를 의미하며, 후자는 민간이 공공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을 형성하여 공공의 사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경비이다.<sup>3)</sup> 또한, ‘vulex\_per’는 주민 1인당 취약계층 지원 지출을 의미하는 변수로 사회복지 지출 중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출 항목이다.

산업과 경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총 6개의 변수가 수집되었다. ‘coops\_100’은 주민 100명당 협동조합의 수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협동조합의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coop.g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사회적경제는 협업을 통해 발전하는 특징이 있는 경제 영

3)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민간 위탁 형식으로 수행한다고 할 때, 이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이전하는 경비가 민간이전 지출인데 반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나 책상 등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가 민간자본이전 지출이다.

역이다. 사회적기업 중 협동조합을 거쳐 인증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고,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가의 사회적경제 입문 통로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협동조합 그 자체를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조합은 일종의 생활체육으로서 엘리트 체육인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이주호, 2013). ‘grdp\_per’는 주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한다. 지역 내 총생산은 생산 측면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시군구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산업별 활성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를 네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retail\_100’은 주민 100명당 도소매 업체 수를, ‘serv\_100’는 주민 100명당 서비스업체 수를, ‘welf\_100’는 주민 100명당 보건 및 사회복지 업체 수를, ‘manuf\_100’은 주민 100명당 제조업체 수를 각각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 어떤 산업의 부문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지 혹은 어떤 산업과 갈등 속에 억제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변동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총 4개의 변수가 수집되었다. ‘elderly\_r’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노령화의 정도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집되었다. ‘forei\_r’은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사회적기업과 외국인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pgrowth’는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sphouse’는 1인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변수로서 이 역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인 가구는 주로 독거노인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형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회귀모형에서 효과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독립변수 이외 광역시 소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광역더미변수(metro\_city)’와 지역별 위치를 통제하는 변수가 통제 변수로서 수집되었다.

〈표 1〉 변수의 정의

변수의 유형	요인	변수명	조작적 정의	출처
종속 변수	사회적 기업	<i>soents_100</i>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 (사회적기업 수/주민등록인구×100)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독립 변수	정부 지출	<i>expend_per</i>	주민 1인당 총 지출 (총 지출/주민등록인구)	지방재정365
		<i>p_trans_per</i>	주민 1인당 민간이전 지출 (민간이전지출/주민등록인구)	
		<i>c_trans_per</i>	주민 1인당 자본이전 지출 (자본이전지출/주민등록인구)	
		<i>vulex_per</i>	주민 1인당 취약계층 지원 지출 (취약계층 지원 지출/주민등록인구)	
	산업과 경제	<i>coops_100</i>	주민 100명당 협동조합의 수 (협동조합 수/주민등록인구×100)	coop.go.kr
		<i>grdp_per</i>	주민 1인당 GRDP (GRDP/주민등록인구수)	통계청 지역 통계총괄과
		<i>retail_100</i>	주민 100명당 도소매 업체 수 (도소매 업체 수/주민등록인구×100)	
		<i>serv_100</i>	주민 100명당 서비스 업체 수 (서비스 수/주민등록인구×100)	
		<i>welf_100</i>	주민 100명당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업체 수/주민등록인구×100)	
		<i>manuf_100</i>	주민 100명당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수/주민등록인구×100)	
	사회변동	<i>elderely_r</i>	노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i>forei_r</i>	외국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수)	
		<i>popgrowth</i>	인구증가율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i>sphouse</i>	1인 가구 비율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수)	
통제 변수	행정 및 위치 정보	<i>metro_city</i>	광역더미변수 (광역시에 위치한 구이면 1, 아니면 0)	NA
		<i>seoul</i>	서울지역더미변수 (서울시에 위치한 구이면 1, 아니면 0)	
		<i>gyeong_in</i>	경기인천지역더미변수 (경기도와 인천시에 위치한 시군이면 1, 아니면 0)	
		<i>kangwon</i>	강원지역더미변수 (강원도에 위치한 시군이면 1, 아니면 0)	

	<i>choong_d</i>	충청대전지역더미변수 (충청남북도와 대전시에 위치한 시군구이면 1, 아니면 0)
	<i>jeolla_k</i>	전라광주지역더미변수 (전라남북도와 광주시에 위치한 시군구이면 1, 아니면 0)
	<i>geongs_p_w</i>	경상부산울산지역더미변수 (경상남북도와 부산시 및 울산시에 위치한 시군구이면 1, 아니면 0)

주1 : 음의 값(-)이 존재하는 인구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비율변수는 회귀모형에서 자연로그를 취한 형태로 추정되었음

주2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GRDP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정보가 수집되었음. 한편, GRDP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정보가 수집되었음 구성

## 2) 기술통계량

다음의 <표 2>는 이 연구에서 활용된 비율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 수(soents\_100)의 평균은 약 0.006개이며, 협동조합(coops\_100)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 여섯 배 이상 많은 약 0.039개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지출 변수의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주민 1인당 총지출(expend\_per)은 5,807,000원, 민간이전 지출(p\_trans\_per)은 703,000원, 민간자본 이전 지출(c\_trans\_per)은 295,000원, 취약계층 지원 지출(vulex\_per)은 165,000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 및 경제 변수의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주민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grdp\_per)은 29,643,000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산되며, 산업별 업체는 주민 100명당 도 소매 업체 수(retail\_100)는 2.126개, 서비스 업체 수(serv\_100)는 5.932개,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수(welf\_100)는 0.298개, 제조업체 수(manuf\_100)는 0.940개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동 변수의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elderely\_r)과 외국인 비율(forei\_r)은 각각 약 19.719%와 0.023%이고, 인구증가율(popgrowth)은 -0.219%를 보이며, 1인 가구 비율(sphouse)은 32.182%를 보인다.

〈표 2〉 비율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단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i>soents_100</i>	개	0.006	0.005	0.004	0.001	0.016
정부 지출	<i>expend_per</i>	백만원	5.807	4.278	4.246	1.165	17.471
	<i>p_trans_per</i>		0.703	0.604	0.358	0.186	1.790
	<i>c_trans_per</i>		0.295	0.146	0.334	0.002	1.641
	<i>vulex_per</i>		0.165	0.143	0.098	0.000	0.870
산업 및 경제	<i>coops_100</i>	개	0.039	0.032	0.024	0.009	0.148
	<i>grdp_per</i>	백만원	29.643	24.856	21.454	6.609	207.659
	<i>retail_100</i>	개	2.126	1.991	0.971	0.944	12.574
	<i>serv_100</i>		5.932	5.658	1.875	3.282	23.312
	<i>welf_100</i>		0.298	0.291	0.062	0.177	0.832
	<i>manuf_100</i>		0.940	0.781	0.737	0.136	4.999
<i>elderely_r</i>	%		19.719	17.500	7.776	7.300	38.900
사회 변동	<i>forei_r</i>	%	0.023	0.017	0.018	0.003	0.098
	<i>popgrowth</i>	%	-0.291	-0.700	2.188	-5.680	9.690
	<i>sphouse</i>	%	31.182	32.000	4.987	18.200	47.600

다음의 <표 3>은 이 연구에서 활용된 명목변수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더미변수(metro\_city)는 70개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시 더미변수(seoul)는 23개, 경기도와 인천시 더미변수(gyeong\_in)는 33개, 강원도 더미변수(kangwon)는 15개, 충청남북도와 대전시 더미변수(choong\_d)는 28개,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더미변수(jeolla\_k)는 37개, 경상남북도와 부산 및 울산시 더미변수(geongs\_p\_w)는 74개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명목변수의 기술통계량(빈도)

변수	빈도	비율
<i>metro_city</i>	70	0.338
<i>seoul</i>	23	0.111
<i>gyeong_in</i>	33	0.159
<i>kangwon</i>	15	0.072
<i>choong_d</i>	28	0.135
<i>jeolla_k</i>	37	0.179
<i>geongs_p_w</i>	74	0.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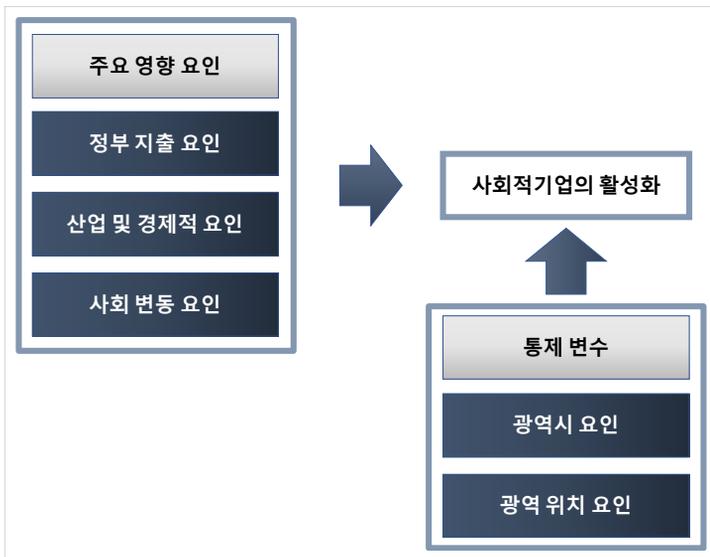
### 3. 연구의 분석 모형 및 회귀식의 설정

다음의 <그림 3>은 이 연구의 분석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 지출 요인, 산업 및 경제적 요인, 사회 변동 요인 등을 근거로 변수를 추출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해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및 경제적 요인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변수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운영 방식은 정부의 공공 구매와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하되, 대부분의 사업에서 기존 민간 영역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변동 요인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의 인구 구성학적 혹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인증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연구의 회귀모형에서는 서울시와 광역시가 지니는 자치권이 광역도 정부가 가지는 자치권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sup>4)</sup>하여, 광역시 안에 위치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지를 더미

4) 예를 들어, 세입의 구조가 다르며 도시계획 상 권한이 다르다.

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크게 지리적 권역으로 구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권역, 경기 및 인천 권역, 강원 권역, 충청남북도 및 대전 권역, 전라남북도 및 광주 권역, 경상남북도, 대구, 울산 및 부산 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회귀모형에서 통제한다. 지리적 특징에 따른 거시경제 현황과 정치적 특징 등이 통제될 것이다.

〈그림 3〉 연구의 분석 모형



이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요인을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c_1 + \varepsilon$$

위의 모형에서  $y$ 는 종속변수로서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로 측정

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이며,  $x_1$ 은 정부 지출 요인을 대리하는 변수의 벡터,  $x_2$ 는 산업 및 경제적 요인을 대리하는 변수의 벡터,  $x_3$ 은 사회 변동 요인을 대리하는 변수의 벡터이다. 이 상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회귀 모형이 추정된다.  $c_1$ 은 통제 변수의 벡터인데, 광역시더미변수와 권역 더미 변수로 구성된다.  $\varepsilon$ 은 회귀모형의 오차항이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매우 효과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경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독립변수의 추출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회귀분석의 방법이다(Draper & Smith, 1981). 단계적 회귀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전진 선택(forward selection) 방법은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하여 모형의 적합성(model fit)을 가장 높이는 변수를 한 단계에 하나씩 추가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의 하나이다. 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변수가 더 없으면 추정이 종료된다. 두 번째 방법인 후진 제거(backward elimination) 방법은 수집한 변수를 모두 하나의 모형에서 추정한 다음 모형의 적합성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변수부터 한 단계에 하나씩 제거해 가며 추정하는 방법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 남게 되면 이후 추정이 종료된다. 마지막 방법인 양방향 제거(bidirectional elimination) 방법은 변수의 추가와 제거가 모두 발생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진 선택(forward selection) 방법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요인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회귀분석의 활용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변수 선정에 대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기업 연구의 특성상 회귀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회귀모형의 추정 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단계적 회귀분석의 큰 장점이다. 통계적으로 굳이 필요 없는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어 수정된 결정계수의 값을 하락시키고, 정작 주요한 변수의 유의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 위협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변수별 수정된 결정계수의 변화량을 도출해냄으로써 가장 중요성이 큰 변수의 순위를 확정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조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후속 연구의 모형 구축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4. 분석의 절차

다음의 <그림 4>는 경험적 결과의 도출을 위한 이 연구의 분석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를 통해 이 연구는 ‘정부 지출’, ‘세 가지 사회적기업 활성화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변수를 추출하였으나 구성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따라서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없는 변수는 제거하고자 한다. 이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는 변수의 순위를 확인하고 결정계수와 변화량 확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해서 경험적 분석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그림 4> 분석의 절차



## IV.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 1. 요인분석의 결과

다음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명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요인분석의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이, 회전 방법으로는 요인 간 추정값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베리맥스(Varimax)가 활용되었다. 베리맥스(Varimax) 방법은 요인간의 차이를 0에 수렴하도록 강제한다. 분석의 결과, 총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Factor 1에는 정부 지출에 관한 모든 독립변수와 사회 변동의 대리 변수 중 일부가 포함되었고, Factor 2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관련 변수와 협동조합이 포함되었으며, Factor 3에는 제조업과 함께 사회·경제의 대리 변수가 포함되었다.

전술한 바대로, 요인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수집된 변수의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Factor 3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요인분석의 결과, Factor 1에 포함된 노인 인구 비율(elderly\_r)과 1인 가구 비율(sphouse)은 통계적으로는 구성 타당성이 결여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모형의 추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Factor 2에는 제조업체 수(manuf\_100)를 제외한 모든 ‘산업과 경제’의 설명 변수가 포함되었다. 한편, 제조업체 수(manuf\_100)는 사회 변동 요인에 포함됨으로써 구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귀모형의 추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업체의 특성상 지역의 외국인 수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GRDP와도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수(forei\_r)와 지역 내 총생산(grdp\_per)의 추정 결과로 제조업체 수(manuf\_100)의 추정 결과를 대신한다.

〈표 4〉 요인분석의 결과(N: 207)

Variable	Factor1: 정부 지출	Factor2(산업과 경제)	Factor3(사회 변동)
<i>expend_per(ln)</i>	0.961	0.095	0.100
<i>c_trans_per(ln)</i>	0.921	0.043	0.152
<i>p_trans_per(ln)</i>	0.914	0.184	0.078
<i>elderely_r*</i>	0.868	0.219	-0.183
<i>vulex_per(ln)</i>	0.633	0.292	-0.152
<i>sphouse*</i>	0.527	0.502	-0.047
<i>serv_100(ln)</i>	0.080	0.917	0.112
<i>retail_100(ln)</i>	0.125	0.896	0.192
<i>welf_100(ln)</i>	0.319	0.681	-0.240
<i>coops_100(ln)</i>	0.464	0.605	-0.096
<i>forel_r</i>	-0.035	0.020	0.777
<i>manuf_100(ln)*</i>	0.317	0.150	0.698
<i>grdp_per(ln)</i>	0.104	0.338	0.665
<i>popgrowth</i>	-0.220	-0.380	0.507

- 주1 : (ln) 표시: 변수가 자연로그를 취한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시행
- 주2 : 회전방법: 베리맥스(Varimax), 요인분석 방법: 주성분 분석(PCA)
- 주3 : 표 안의 제시된 값은 요인적재량임
- 주4 : \*는 회귀모형의 추정에서 제외된 변수임

## 2.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의 추정 결과

전술한 바대로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활용한 PCA 분석은 요인 간 차이를 극대화하여 다른 요인에 속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요인 산출에 관한 구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요인에 포함된 변수 간의 높은 상관성은 회귀모형 추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요인점수(factor score)로

회귀모형을 추정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잃음으로써 연구의 목적 달성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수부터 투입될 뿐만 아니라, 다중공선성이 높은 변수는 포함하지 않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5>는 단계적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단계 1’에서는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가장 높이는 변수로 협동조합(coops\_100)이 선택되어 효과가 추정되었다. 협동조합(coops\_100)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양의 회귀계수(0.595)가 도출되었다. 이는 곧, 주민 100명당 협동조합의 수가 1% 증가하면,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가 약 0.595% 증가함을 의미한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에서 이미 추가된 협동조합(coops\_100)에 이어 민간이전 지출(p\_trans\_per)이 추가되어 회귀모형에서 효과가 추정되었다. 협동조합(coops\_100)은 여전히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민간이전 지출(p\_trans\_per)도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회귀계수는 0.332로 도출되었다. 이는 곧, 주민 1인당 민간이전 지출이 1% 증가할수록,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가 0.332개 증가함을 의미한다. ‘단계 3’의 회귀모형 추정에서는 ‘단계 2’에서 이미 추가된 두 변수에 통제변수인 경기도와 인천시 더미 변수(gyeong\_in)가 추가되었다. 이 변수(gyeonggi\_in)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0.261로 도출되었다. 최종 단계인 ‘단계 4’의 추정에서는 ‘단계 3’에서 포함된 변수에 도소매 업체 수(retail\_100)가 추가되었다. 회귀 추정의 결과, 도소매 업체 수(retail\_100)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0.280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곧, 주민 100명당 도소매 업체 수가 1% 증가할수록,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가 0.28% 증가함을 의미한다.

예측한 대로 모든 회귀모형의 추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단계의 추정에서 수정된 결정계수는 0.329로 도출되었는데 최종 추정 모형에 포함된 네 변수는 사회적기업의 변화를 약 33%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변화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변수는 단연 협동조합(coops\_100)이다. 단계 1에서는 무려 단 하나의 변수가 종속변수인 주민 100명당 사회적기업의 수를 27.7% 정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단계 2’의 민간이전 지출(p\_trans\_per)과 ‘단계 3’의 경기도 터미변수(geyeonggi) 및 ‘단계 4’의 도소매 업체 수(retail\_100)의 추가는 각각 수정된 결정계수를 2.1%, 1.9%, 1.2% 향상시켰다.

〈표 5〉 회귀분석의 결과(N: 207)

구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최종)	
	회귀 계수	VIF						
<i>expend_per(ln)</i>								
<i>c_trans_per(ln)</i>								
<i>p_trans_per(ln)</i>			0.332 ***	1.456	0.323 ***	1.457	0.332 ***	1.459
<i>vulex_per(ln)</i>								
<i>serv_100(ln)</i>								
<i>retail_100(ln)</i>							0.280 **	1.363
<i>welf_100(ln)</i>								
<i>coops_100(ln)</i>	0.595 ***	1.000	0.475 ***	1.456	0.430 ***	1.532	0.351 ***	1.860
<i>forei_r</i>								
<i>grdp_per(ln)</i>								
<i>popgrowth</i>								
<i>gyeong_in</i>					-0.261 **	1.088	-0.233 **	1.107
상수	-3.277		-3.919		-4.025		-4.499	
수정된 결정계수	0.277		0.298		0.317		0.329	
결정계수 증가량 (×100)	27.7%		2.1%		1.9%		1.2%	
F	79.838***		44.818***		32.845***		26.226***	

주1 : \*, \*\*, \*\*\*는 0.1, 0.05, 0.01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주2 : 모든 모형에서 Shapiro - Wilk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으로써 등분산성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연구는 주로 내부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많지 않았던 외부조건을 효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sup>5)</sup>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의 일종인 단계적 회귀분석은 수집한 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모형의 추정 전에 제거함으로써 모형 적합성을 높이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단계적 회귀분석의 추정 결과 총 네 변수가 유의하였다. 네 변수 중 중요성을 판단해 보면, 주민 100명당 협동조합의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주민 1인당 민간이전 지출(단위: 백만 원), 경기도 더미변수와 주민 100명당 도소매업체의 수가 뒤를 이었다. 이상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사회적기업 입문 과정으로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혁진(2010)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협동조합의 경험을 제시한다. 최혁진(2010)에 따르면, 성공적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상법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혁진(2010)은 우리나라 역시 자발성에 기초한 협동조합 운동이 민간에서 분명히 존재하여 왔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비판은 지역 사회에 경제

---

5) 패널 분석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만하다. 다만,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인증 수가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매우 소수라는 점에서 패널 분석 역시 추정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협동조합이 적다는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14,526개의 협동조합 중, 7,050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약 48%)인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약 40%가 지역 사회의 연대 회의, 지역 협의체, 연합회 등에 가입하여 있으며, 1개의 협동조합 당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투자액이 900만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 평가할 지점이 있다(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런 협동조합의 활동은 지역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험적인 결과가 많이 축적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가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배양 터’에 관심을 갖는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 단체가 배양 터로서 관심을 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중요 구성 조직체로서 협동조합은 경영 모델 수립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이지만 그 자발성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려면 경영 모델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군구 수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및 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의 통합 지원을 위해 법률 체계와 지원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절적인 지원은 협동조합의 경험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민간이전 지출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출에 의해 사회적경제 부문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최유진, 2016). 사회적기업의 인종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직접 지출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발굴 정책이 주요 정책 기조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

업 부문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출은 개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출에서 연대와 협력에 대한 지출로 초점을 바꿔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사회적기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공동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연대 조직의 지역 사회 공헌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창업팀 발굴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기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이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인력 채용 등에 지원함으로써 창업 후 폐업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창업 위주의 지원은 단기적 성과로 환원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낭비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과의 협업 특히 도소매 업체와의 협업도 정책 의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문 (sector)로서 정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왔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의 자금 공급원은 크게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정부 지원 및 기부 등이다(네모토마사쓰구·박대호·이병하, 2015). 최근 공공 구매의 경우 다수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역시 사회적기업의 제도 아래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민간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고객은 여전히 공공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간에게까지 진입하는데 장벽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정부는 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민간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의 판로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 제품의 경우 지역 도소매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간극을 좁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R 차원에서 협업하고자 하는 민간 도소매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통합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요인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내부 요인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하고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주로 의미한다. 둘째, 앞서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했듯이 패널 분석을 활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조건을 인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더 큰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영(2019).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협업 관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분석”, 「벤처창업연구」, 14(3), pp.47 - 58.
- 공혜원(2019).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인특성 관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Korea Business Review」, 23(1), pp.127 - 151.
- 김정인(2013). “사회적기업 목적달성 모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 사회적기업가 특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1), pp.39 - 66.
- 김진열·정문기·이규명(2016).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시흥시민 햇빛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pp.337 - 361.
- 김창범·이찬영(2016). “한국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율성 분석-인증유형별·산업유형별·지역별”, 「한국경제연구」, 34(3), pp.43 - 73.
- 네모토마사쓰구·박대호·이병하(2015). “충북지역 공공조달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태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pp.227 - 241.
- 배정환(2011).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 pp.31-58.
- 이상연·전혜선·채명신(2017).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경영효율성 평가”, 「한국비즈니스리뷰」, 10(1), pp.1-18.
- 이상연·채명신(2015).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DEA모형을 통한 효율성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8(2), pp.3 - 35.
- 이주호(201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기업 환경변화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3(1), pp.73-104.
- 전영옥·안국찬(2009).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이 지역사회 조직에 미치는 영향-자율성 및 구축·구인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pp.251 - 272.
- 최유진(2016).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 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20(3), pp.111 - 132.

- 최지혜·이찬영(2019).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고용 창출 효과: 사회적일자리와 자체 고용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 연구」, 9(2), pp.87-120.
- 최혁진(2010). “협동조합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과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기업연구」, 3(1), pp.67-90.
- 최현도(2016).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지역과 산업환경의 역할”, 「벤처창업 연구」, 11(4), pp.117-126.
- 한국노동연구원 (2019). 「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획재정부.
- Dees, J.(1998). “Enterprising non-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76(1), pp.55-67.
- Defourny, J. & Nyssens, M.(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pp.202-228.
- Doherty, B., Haugh, H. & Lyon, F.(2014). “Social enterprises as hybrid organization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6, pp.417-436.
- Draper, N. & Smith, H.(1981). *Applied Regression Analysis*, 2d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azenber, R., Bajwa-Patel, M., Roy, M. J., Mazzei, M. & Baglioni, S.(2016). “A comparative overview of social enterprise ‘ecosystems’ in Scotland and England: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6(2), pp.205-222
- Jenner, P. & Fleischman, D.(2017). “Enhancing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A value co-creation pathway”, *e-Journal of Social & Behavioural Research in Business*, 8(1), pp.57-74.
- Kerlin, J.(2009). *Social enterprise: A global comparison*, Lebanon, NH: Tufts University Press.
- Matsunaga, Y., Yamauchi, N. & Okuyama, N.(2010). “What Determines

- the Size of the Nonprofit Sector?: A Cross-Country Analysis of the Government Failure Theory”, *Voluntas*, 21(2), pp.180-201.
- Nissan, E., Castaño, M. & Carrasco, I.(2012). “Drivers of non-profit activity: a cross-country analysis”, *Small Business Economics*, 38(3), pp.303-320.
- Pearce, J.(2003). *Social enterprise in any 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Petrella, F. & Richez-Battesti, N.(2016). “Patterns of evolu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France: a focus on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6(2), pp.234-246.
- Pevcin, P(2011). “Size and Importance of Civil Society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4(17), pp.371-379.
- Ridley-Duff, R.(2008). “Social enterprise as a socially r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14(5), pp.291-312.
- Salamon, L. M, Sokolowski, S. W. & Anheier, H. K.(2000),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An overview*, Working Paper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 38,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Baltimore.

# Finding the Driver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Municipalities\*

Choi, Eugene\*\*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determinants of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local municipalities. So far, studies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have mainly focused on intern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external conditions that have not yet been extensively analyzed theoretically or empirically have been estimated using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a type of data mining analysis technique, is a regression method that increases model fit by removing insignificant variables from the collected variables before the model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stepwise regression estimation, co-op's per 100 residents,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per capita, and retail shops per 100 resid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co-operative, stepwise regression,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투고일: 2020.08.06 | 심사완료일: 2020.08.25 | 게재확정일: 2020.08.28.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angnam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8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Kangnam University

**최유진(崔維眞)** 현재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오하이오 주 소재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201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및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적경제 레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19)’, ‘AHP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교의 관점에서(201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도구 연구: 유희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echoi0816@icloud.com)